피의자에게 거짓말할 권리를 줘야 하나

태평로

최원규
논설위원

가수 김호중씨의 음주 뺑소니 사건을 보면서 피의자나 참고인에게 거짓말할 권리를 언제까지 줘야 하느냐는 의문이 새삼 떠올랐다. 우리 법은 법정에서 증인이 하는 거짓말은 위증죄로 처벌하지만, 수사기관에서 하는 거짓말에 대해선 처벌 규정이 없다. 대부분 방어권 차원에서 용인한다. 피의자든 참고인이든 마찬가지다. 이젠 웬만한 사람들도 이를 다 안다. 그래서 김씨와 소속사도 사고 발생 열흘 동안 대놓고 음주 사실을 부인했을 것이다.

그 거짓을 덮으려고 김씨와 소속사 측은 운전자 바꿔치기, 말 맞추기, 조직적 증거인멸을 했다. 거짓이 더 큰 거짓을 낳고 범죄로까지 이어졌다. 소속사 대표와 직원은 이 일로 구속됐고, 김씨도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등의 혐의로만 구속됐다. 사법 시스템 농락의 시초는 거짓말이었는데 그것으론 아무 처벌도 받지 않았다.

미국은 다르다. 허위 진술죄 규정이 있어 수사기관에서 한 거짓말도 처벌할 수 있다. 미국 연방 대법원도 1998년 피의자에게 거짓말할 권리가 없음을 명백히 밝혔다. "회사에서 현금이나 선물을 받았느냐"는 연방 조사관 질문에 노조 간부가 "아니오"라고 답한 것이 허위 진술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소극적 범행 부인도 허위 진술죄라고 본 것이다. 미국 헌법이 보장하는 진술 거부권은 불리한 진술을 거부하고 침묵할 권리를 준 것일 뿐 일단 입을 열면 진실을 말하라는 것이다.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진술 거부권의 취지도 미국과 다를 게 없다. 그런데 허위 진술을 처벌할 규정이 없다 보니 이젠 너 나 할 것 없이 거짓말을 한다. 거짓말이 판치면 힘 있고, 돈 있고, 교활한 범죄

김호중씨 거짓말 美선 처벌 대상
우린 허위 진술죄 없어 처벌 못 해
범죄자들 거짓말 악용 사례 늘어
우리도 허위 진술죄 도입 검토해야

자가 법망을 빠져나갈 가능성이 커지고, 범죄 피해자는 구제받기 더 어려워진다. 이것은 정의롭지 못한 것 아닌가.

처벌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간접적이긴 해도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로 처벌할 수는 있다. 하지만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가 드물다. 대개의 경우 법원이 수사로 밝혀낼 수 있을 정도의 허위 진술은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허위 진술이 통해도 이는 수사기관이 충분히 수사하지 못한 결과일 뿐 수사기관을 속인 행위만으로 죄를 묻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허위 진술을 하게 되면 수사기관 입장에선 불필요한 증거조사나 관련자 소환을 해야 할 수 있고, 자칫하면 무고한 사람이 처벌될 수도 있다. 때로 수사·재판 지연도 초래한다. 그것은 국가의 사법 기능을 방해한 것 아닌가. 그런데도 법원이 허위 진술에 너무 관대해 거의 처벌이 어렵다.

형사 사법의 중요한 가치는 적법 절차에 의한 피의자 인권 보장과 실체적 진실 발견이다. 둘 다 포기할 수 없는 가치다. 미국은 피의자 인권은 보장하되 사건 실체를 밝히는 데 필요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고 있다. 허위 진술죄도 그중 하나다. 그런 균형이 필요한데 우리는 그동안 피의자 인권에만 치중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

우리도 이젠 허위 진술죄 도입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본다. 자백을 강제하자는 게 아니다. 피의자 입장에선 불리하면 진술을 거부하면 된다. 적어도 적극적인 거짓말은 하지 못하게 하자는 것이다. 진술 거부와 허위 진술은 완전히 다른 문제다. 검찰이 이를 무기로 기소권을 남용할 우려가 있다면 그것을 막을 장치를 두면 된다. 적용 대상을 뇌물 등 권력형 범죄, 살인·마약·테러 등 중대 범죄로 제한할 수도 있을 것이다. 허위 진술죄는 그간 학계에서도 많이 논의했던 내용이다. 이젠 논의를 본격화했으면 한다. 교활한 범죄자들이 법망을 빠져나가려고 거짓말을 방어 수단으로 악용하는 상황을 언제까지 지켜볼 수만은 없지 않은가.

김준의 맛과 섬 [193]

울릉도 따개비밥

울릉도는 밥값이 비싸다. 밥은 2만원, 국수는 1만5000원 선이다. 식재료를 포항이나 강원도에서 배로 가져와야 하니 이해할 만하다. 하지만 가족 여행을 하려고 장소를 찾을 때 울릉도를 두고 고민스러운 것도 현실이다. 그렇다고 울릉도에 와서 집에서 먹을 수 있거나 육지에서 쉽게 맛볼 수 있는 것만 선택할 수 없다. 그래서 맛본 것이 따개비밥이다.

물에서 따개비라면 절지동물로 갯바위에 붙어 서식하는 해양 생물이다. 따개비는 물이 들면 위쪽 입에서 만각 6쌍을 내밀어 플랑크톤을 잡아먹는다. 만각을 살펴보면 절지동물로 분류한 이유를 알 수 있다. 그런데 식당 주인이 보여준 따개비는 복족류에 속하는 삿갓조개다. 바위에 붙어 생활하는 것은 같지만 아주 조금씩 이동하며 작은 이빨로 바위에 붙은 조류를 갉아 먹는다. 울릉도 주민들은 '굴등', 여수와 신안에서는 '배말'이라고 부른다.

삿갓조개류는 진주배말, 애기삿갓조개, 둥근배무래기 등이 있다. 울릉도에서는 삿갓조개를 넣어 밥, 죽, 국수 등을 만들어 먹었다. 여수나 진도에서는 국을 끓이거나 부추나 채소 등과 무친다. 톳이나 굴을 넣어 밥을 짓기도 하지만 배말을 넣는 경우는 드물다. 따개비를 삶으면 살과 껍질이 쉽게 분리된다. 살을 건져내고 껍질만 다시 삶는다. 따개비를 치대서 국물을 내기도 한다. 이렇게 준비한 육수에서 이물질을 걸러내고 밥을 짓거나, 국을 끓인다. 따개비밥은 간장과 참기름을 더해 압력솥에 짓는다.

큰 따개비를 얻으려면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갯바위로 가야 한다. 미끄러운 갯바위는 자연산 명이나물을 얻기 위해 성인봉 벼랑에 매달리는 것만큼 위험하다. 옛날에는 손이 닿는 곳에서 쉽게 얻었다. 저동항 한 식당에는 전복 크기의 따개비 껍질을 벽에 걸어 놓았다. 따개비밥은 양념장을 더해 살살 비벼 먹으면 좋다. 나는 그냥 비벼서 명이 장아찌로 싸 먹었다. 따개비와 홍합을 섞어서 밥을 짓기도 한다. 식당 주인은 홍합과 따개비를 섞어 밥을 지으면 맛이 더 좋다고 한다. 둘 다 맛을 볼 수 있는 '홍따밥'이다.

전남대 학술연구교수

社 說

연금 개혁 무산 후폭풍, 국내 투자 비중 줄이는 국민연금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현재 14.2%인 국내 주식 투자 비율을 2029년까지 13%로 낮추기로 했다. 3년 뒤부터는 보험료 수입보다 연금 지급액이 더 많아져 보유 자산을 팔아 부족분을 채워야 하기 때문이다. 국내 증시 최대 큰손인 국민연금이 주식을 팔면 주가에 악영향을 미치고 이는 다시 국민연금의 운용 수익률을 끌어내리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연금 개혁 지연으로 기금 고갈 속도를 늦추지 못한 것이 증시 악재로 작용하는 것이다.

지난 5월 말 21대 국회 막바지에 국민연금 모수 개혁(보험료율·지급율 조정)이 성사됐다면 상황이 달라졌을 것이다. 당시 여야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자는 데 합의했지만, 막판에 해병대원 특검법 논란이 불거지며 대통령실과 여당이 "다음 국회로 넘기자"고 해 무산됐다. 26년간 묶여 있던 보험료율을 여야 합의대로 4%포인트 올렸으면 기금 소진 시점이 2055년에서 2064년으로 9년 늦춰졌을 것이고,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 비율 축소도 한숨 돌릴 수 있었을 것이다.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 비율 축소는 1988년 기금 설립 이후 국내 주식 투자 수익률은 연평균 6.3% 수준인 반면 해외 주식 투자에선 그보다 배 가까이 높은 연 11%의 수익을 올려온 것도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수익률을 1%포인트 끌어올리면 기금 소진 시점을 6년 늦출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 고수익을 내는 해외 주식 투자 비율을 더 늘리려는 것이다.

정부는 한국 증시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이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국민연금 같은 대형 기관투자자가 국내 주식 투자를 늘려 증시 수급 기반을 든든히 다질 필요가 있다. 상장 기업들이 연금의 주식 투자금을 받아 신규 투자를 더 늘리고 기업 이익을 배당금으로 연금에 환원하면 국민 경제 선순환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국내 증시 시가총액 중 국민연금의 보유 비율은 5.8%인 반면 일본 공적 연금은 일본 증시 시가총액의 25%를 보유 중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K밸류업을 위해서라도 국민연금 개혁이 절실하다. 22대 국회는 하루빨리 연금 개혁안을 처리해야 한다. 국민연금·기초연금 통합 같은 구조 개혁은 이해관계가 복잡해 시간이 걸리는 만큼 21대 국회 때 이미 합의된 모수 개혁부터라도 우선 실행해야 한다.

나랏빚 폭증시키며 그 실태는 숫자 조작으로 속였다니

문재인 정부 때 재정 씀씀이 확대를 정당화하기 위해 홍남기 당시 경제부총리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전망치를 절반 수준으로 축소 발표하도록 지시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집값과 소득 통계를 왜곡·분식한 데 이어 나랏빚 전망까지 축소해 실정(失政)을 가리려 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2020년 장기 재정 전망 발표 때 기획재정부는 시뮬레이션 모델을 통해 국가채무 비율이 2060년엔 153%로 올라갈 것이란 전망치를 산출했다. 이를 보고받은 홍 부총리는 "국민이 불안해한다"면서 두 자릿수로 낮추도록 지시했다. 그는 원래 '재량지출 증가율'을 경제성장률에 연동하도록 돼있는 것을 '총지출 증가율과 연동' 하도록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했다. 이를 통해 기재부는 81%로 낮춘 수치를 만들어 발표했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장기재정전망협의회가 검증하도록 한 절차도 빼버렸다. 기재부 주무 국장인 A 국장이 홍 부총리 지침을 이행하기 위해 협의회의 심의·조정을 거치지 않고 임의로 방법을 바꿨다. 실무자들이 반대했지만 A 국장은 이를 묵살했다고 한다. 당시 기재부 담당 팀장과 실무자들은 '홍 부총리 지시가 부당하다' '국민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데 정반대 가정을 한 것에 스트레스가 심하다' '역사에 죄를 짓는 것' 등의 대화를 주고받은 것으로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이 조세재정연구원과 함께 제대로 된 전제를 적용해 재정 전망을 했더니 2060년 국가채무비율은 148.2%로 도출됐다. 애초 기재부 전망치와 비슷하다. 그런데도 홍 전 부총리가 왜곡된 수치를 고집한 것은 문 전 대통령 지시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당시 문 대통령이 주재한 청와대 회의에서 "(2060년 국가채무비율 예측치는) 의미는 크지 않으면서 사회적 논란만 야기할 것이다. 불필요한 논란이 커지지 않게 잘 관리하고 신경 써주기 바란다"고 했고, 한 달 뒤 81%라는 왜곡된 수치가 만들어졌다.

문 정부는 나랏빚 내서 돈 푸느라 5년간 국가부채를 400조원 가까이 늘렸다. 2016년 말 627조원이었던 국가채무는 2021년 말 971조원으로 늘어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이 불렸다. 빚은 폭증시키면서 그 실태는 숫자 조작으로 눈가림한 것이다.

동영상 사설

민주당, 또 "MBC 사수" 다시 "방통위원장 탄핵"

더불어민주당은 MBC·KBS·EBS 등 공영방송의 사장과 이사진을 사실상 자신들 뜻대로 좌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3법을 재추진하겠다고 했다. 겉으론 '공영방송 정상화'를 내세우지만 실제론 "MBC를 사수해야 한다"는 말을 공공연하게 한다. MBC를 민주당 편으로 붙잡아두기 위해 법을 고치려는 것이다. 오는 8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인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법 시행 시기도 '공포 즉시'로 못 박았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도 방송법을 일방 처리했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었다.

민주당은 야당이던 2016년 비슷한 방송 법안을 당론과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정권을 잡자 공약과 반대로 KBS와 MBC 사장을 폭력적 방법으로 내쫓았다. 공영방송은 그 후 문재인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했다. 다시 야당이 되자 또 반대로 "정권의 방송 사유화 악순환을 끊겠다"고 한다. 내로남불이다.

민주당은 또 김홍일 방통위원장 등에 대해 책임을 묻고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했다. 방통위원회가 MBC·KBS 이사 추천권 등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위원장을 탄핵하겠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이 탄핵되면 방통위는 의사 정족수 부족으로 운영이 불가능해진다. 민주당은 작년 말에도 이동관 전 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밀어붙였다. 결국 취임한 지 100일도 안 된 방통위원장이 구체적 법률 위반 사실이 없는데도 자진 사퇴했다. 이로 인해 방통위 업무가 완전 마비됐고 연내에 끝마쳐야 하는 141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가 불발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방송 장악을 위해 중앙 행정부처를 무력화시키는 횡포를 또 부리겠다는 것이다.

공영방송은 대통령 권력뿐 아니라 거대 야당으로부터도 자유로워야 한다. 그런데 민주당은 자기들이 권력을 잡았을 때와 야당일 때 완전히 다른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2021년엔 비판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 '언론 징벌법'도 밀어붙였다. 방송을 자기들 선전 도구로 두려고 입법권을 남용해 왔다. 민주당이 말하는 '언론 개혁'은 '언론 장악'의 다른 말이다.

한류 USB 풍선 쏴 올려라

이재명·조국·문재인·김정숙·김혜경
소추·재판·구속 다그쳐라 …
조희대 사법부 분발하라

평양 것들 [똥 폭탄]엔 [한류 폭탄]으로 맞대응
남한 NL 것들 [도둑 떼 정치]엔 전광석화 사법 처치
남북 전체주의 극좌파에 역전승 이룰 마지막 기회
동해 석유·가스는 자유진영에 천군만마

☑ 남북한 극좌들의 만행과 패악질

우리는 더는 이렇게 살 수 없다. ***북한 주사파***는 우리 산하에 똥 폭탄을 퍼붓는다. ***남한 [극좌파+중대 범죄 피고인들]***은 우리 정치 지평에 ***[입법 폭거]***를 자행한다.

우리 자유인들은 행복을 추구한다. 발전하고 싶다. 번영하고 싶다. ☆풍요로운 경제 ☆법이 통치하는 나라 ☆공정이 살아 숨 쉬는 사회를 원한다.

누가 이 소망에 찬물을 끼얹는가? ***김정은·김여정*** 등 ***평양 것들***, 그리고 ***남한 극좌 세력***이 그들이다.

☑ 김여정 하명법 폐기했더니, 평양 것들 발작

북한 MZ 세대는 지금 한류(韓流)에 열광하고 있다. ***김정은·김여정***은 이 자연스러운 추세를 핵무기도 막지 못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안다.

그들 남매는 탈북 동포들의 **[대북 전단 + USB]** 살포를 금지하라고 ***문재인***에게 명했다. 문재인은 그것을 법으로 금지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그 ***[김여정 하명법]***이 당연히 폐기되었다. ***김정은·김여정***은 이에 반발해 ***똥 풍선***을 보내기 시작했다.

사람 사는 세상이라면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을 적대한다는게 말이 되나? 21세기 대명천지에서 ☆뉴진스 ☆블랙핑크 ☆김연자 노래를 들었다고 16살 청소년에게 12년 징역을 선고한 것이 말이 되나? 이게 우리가 이고 사는 ***북한 주사파***의 실체다.

☑ 중우정치의 타락,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휴전선 이남에서도 자유인들은 똑같은 무게의 재난을 지고 산다. 입법부를 장악한 ***NL 혁명꾼***들의 패악질이 그것이다.

이들은 1985년 이래 40년 동안 이 나라를 쥐고 흔들었다. 정의·평등 운운하던 이들도 이젠 ***흉악한 기득권력***이 되었다. 문서위조, 배임, 뇌물죄, 선거법 위반, 위증교사죄, 부동산·대출(貸出) 부정 등, 온갖 파렴치 범죄도 저질렀다.

그런 그들을 국가지도층 입네 뽑아주는 ***★중우(衆愚) 정치 ★팬덤 정치*** 또한, 오늘의 한국 민주주의의 수준이다. 22대 국회야말로 ***[타락한 선동가 + 타락한 팬덤]***의 ***[타락한 민주주의]***다.

☑ 어떻게 역전승 할 것인가

개원 첫날부터 저들 ***[범죄꾼 선동가]***들은 ***특검, 특검, 특검***하며 자유 진영 총 붕괴 작전에 돌입했다. 언론들마저 ***★윤석열 임기 단축 ★내각제 개헌***하며 이에 발 벗었다.

이대로 가면? 그 끝은 ***[자유 체제 총 붕괴]***일 것이다.

윤석열 정부와 자유인들은 결단해야 한다. 사즉생(死卽生)의 각오로 역전승을 이뤄야 한다. 어떻게?

대한민국 검찰, 국민의힘, 자유 국민이 총궐기해야 한다. 혼신(渾身)의 결단으로 ***[이재명·조국·문재인·김정숙·김혜경]***에 대한 ※소추 ※재판 ※구속을 다그쳐야 한다. 이것이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하고 합법적인 국가 회생의 길이다.

☑ 자유진영이 해야 할 4가지

- 결론 :

① ***북한 주사파***의 ***똥 폭탄***엔 **[대북 전단 + USB]** 살포에 의한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 투쟁으로!

② ***남한 극좌파***의 ***[도둑 떼 정치]***엔 전광석화 같은 사법적 투쟁으로!

③ 이 투쟁에 동해의 석유·가스도 동참할 것이다. 자유의 정치 경제만이 번영을 약속한다.

④ **[조희대 사법부]**에도 묻는다. 1950년대의 **유병진·김홍섭** 판사를 아는가? 김병로 대법원장을 아는가? 선택하라, 그분들의 길인가, 운동꾼 정치 판사들의 길인가? 선택하라!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고문 / 전 조선일보 주필

뉴데일리 칼럼 더보기 ▼

류근일 칼럼 :
운동권 콤플렉스 허우적대는 안철수 최재형 등
제2의 탄핵 쿠데타(윤석열 타도+내각제 개헌) 편승하려는가 … 과두(寡頭)정치 회원 원하나?

newdaily.co.kr 뉴데일리

이 기사는 인터넷신문 뉴데일리(www.newdaily.co.kr) 칼럼으로 2024년 6월 3일 게재 되었습니다.

NO. 92 뉴데일리 칼럼 프린트 버전 시리즈

뉴데일리 컨텐츠를 지원해주세요 뉴데일리를 아껴주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후원계좌 | 신한은행 140-007-880570 뉴데일리(주)